

참여정부 6개월 환경정책 추진실적 및 계획

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'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'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그간 정부에서는 각종 환경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. 그 동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등을 본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. 정부는 공기·물·폐기물 등 체감 생활환경 개선,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성, 환경친화적인 생산·소비문화 정착 및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〈 편집부 〉

1. 상반기 추진실적

- 수도권 대기환경을 10년 내에 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및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」 제정 추진
 - 관계부처·산업계·시민단체 등으로 합동 T/F를 구성, 협의·조정을 거쳐 '02. 9월 이후 난향을 겪던 특별법안의 내용에 합의('03. 7) 함으로써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기를 마련
- 4대강 유역관리체계 정착 및 상·하수도의 효율적 관리
 -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낙동강 8개 지점별 수질목표치 협의 및 한강수계(광주시) 총량관리계획안 마련('03. 6)
 - 4대강 수질오염의 약 22~37%를 차지하는 농경지, 도로 등 '비점(非點)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지침안' 마련('03. 4)
 - '정수장 효율개선 자가진단 프로그램' 개발·보급('03. 4) 및 한강수계 하수관거 특별정비 시범사업 확정·추진('03. 7) 등 상하수도 관리 강화
-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·관리
 - 환경부-산림청 협의를 통해 백두대간 보전 기

본방향을 정립하고, 「백두대간보전특별법」 공동입법 합의

- 정책입안 및 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전략환경평가(SEA)제도 도입 착수('03. 4월 자료집 발간, 연구용역중)

2. 향후 추진계획

가. 추진 개요

- ◇ 사전예방적 오염총량관리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」 연내제정 및 4대강 상수원의 오염총량관리 기반 확립
- ◇ 국토 난개발을 막고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자연경관 보전, 전략환경평가 등 새로운 국토환경보전의 기틀 구축
-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」 연내 제정 및 경유차 환경대책 추진을 통해 2012년까지 대기환경을 선진국(OECD) 수준으로 개선
 - 특별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법 제정 완료
 - '05년 경유승용차 국내시판에 대비, 에너지 상대

가격 조정, 무·저공해차 세제지원 등 환경대책 추진('03 연구용역, '04 정부방침 확정)

○ 사전예방 기조에 의한 4대강 오염총량관리제를 차질없이 정착, 2005년까지 전국 상수원 수질을 I~II급수로 개선

- 3대강 수계 목표수질을 확정·고시하고('03. 9 낙동강, '03년말 금강·영산강) '03년말 광주시를 시작으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단계적 시행
- 법정부적인「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」확정·추진('03. 10)

○ '선(先)계획-후(後)개발 원칙'에 의한 국토환경보전 제도 정비

-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, 자연경관심의 등 수려한 자연경관에 대한 종합적 보전대책 마련('03. 8, 「자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」마련)

-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전략환경평가 도입 및 국토환경지도 제작('03 수도권, '04~'05 전국)

나. 주요사업별 추진계획

1)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

○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」 연내 제정('03. 9 국회제출, '05. 1 법시행)을 통해 2012년까지 수도권 대기환경을 선진국(OECD) 수준으로 개선

- '07. 7월 부터 대형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

- 저공해차량 보급(제작사) 및 구매 의무화(공공기관 등)를 통해 저공해차량 보급 확대

-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운행차 관리대책 강화와 함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, 무·저공해차 세제지원 등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환경대책 병행 추진('03 연구용역, '04 정부방침 확정)

※ '03. 5. 30일 경제장관 간담회시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여 '05년 국내시판을 허용하되, 추가적인 대기질 악화 방지대책 추진 합의

○ 특별대책 시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

- 관계부처와 협조, 에너지관련 세수 일부 또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대기환경개선에 집중 투자

-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촉진 및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재화를 위한 환경관련 세제 개편

2) 4대강유역 사전예방적 통합관리체계 정착

○ 4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

- 전국 최초로 한강수계 광주(廣州)시의 오염총량관리제를 금년중 시행

- 한강 물관리대책 시행 5년 중간평가를 실시, 왕숙천, 경안천 등 문제수역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('03. 12)

- 낙동강·금강·영산강 등 3대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준비

- 3대강수계 목표수질 설정·고시('03. 9 낙동강, '03년말 금강·영산강) 및 「시·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」수립 추진

○ 비점(非點)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마련

- 공장, 생활하수 등에 비해 관리가 미흡했던 농경지, 도로, 도시노면 등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확정('03. 10), '04년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

○ 주민지원제도 개선 및 상·하류 균형발전 도모

- 수계관리기금(연간 5,300여억원) 주민지원방식을 단기적·개별적 지원에서 중장기적·집단적 지원으로 전환,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

- 상·하류 합동 유역관리네트워크 구축, 강살리기 실천운동 확산 등 시민참여의 유역 자율관리 시스템 강화

-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축산폐수, 오수, 농약 등에 관한 종합적 관리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균형발전사회의 토대 구축